

법령 II - 비상대비 및 재난관리 관계 법령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시행령 포함)

문 1.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비상대비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여 비상대비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한다.
- ② 비상대비업무는 해당 소관별로 자원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 집행한다.
- ③ 주무부장관은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 권한 중 해당 부령으로 정하는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주무부장관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 ④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경우 주무부장관의 중점관리대상인력의 참여 및 중점관리대상물자의 사용 협력 요청에 관한 권한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된다.

문 2.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비상대비업무에 관한 기본지침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전시 전환에 관한 사항
- ㄴ. 비상대비계획의 작성 시기에 관한 사항
- ㄷ. 자원의 배분 우선순위·보충 및 통제 방법에 관한 사항
- ㄹ. 비상사태와 관련되는 중기적 관점에서의 국내외 환경변화 분석 및 예측

- ① ㄱ, ㄹ
- ② ㄴ, ㄷ
- ③ ㄱ, ㄴ, ㄹ
- ④ ㄱ, ㄴ, ㄷ, ㄹ

문 3.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계획에 관한 설명이다. (가) ~ (라)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지침과 인력자원 및 물적자원의 변동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소관 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가) 와/과 협의를 거쳐 (나)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나) 은/는 확정된 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 (다) 은/는 확정된 집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는 확정된 (라) 을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가)	(나)	(다)	(라)
①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총리	중앙행정기관의 장	집행계획
②	국무총리	대통령	국무총리	집행계획
③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총리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행계획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대통령	행정안전부장관	시행계획

문 4. 다음 사례에서 ㉠~㉣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A도의 도지사는 인력·물자 등 자원의 활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준비 및 시행을 위해 필요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관내의 인력자원 및 물적자원을 조사하게 하였다. ㉠ A도 소속 공무원은 관리대상물자인 건설용장비를 소유하는 甲에게 조사의 대상·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조사하였다. 반면, ㉡ 인력자원대상자에 대한 직접 방문 조사는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과학기술자 乙에게는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게 함으로써 인력자원의 실태를 파악하였다. ㉢ 정보보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에 대하여 A도의 도지사는 업체와 관련되는 관계 협회의 장 丙에게 물적자원 및 인력자원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게 하는 방법으로 조사하였다. ㉣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이사장은 丁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에 관한 자격을 취소하고 그 취소 사실을 직접 丁의 거주지 관할 A도의 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였다.

- | | |
|-----------|--------------|
| ① ㉠, ㉡ | ② ㉢, ㉣ |
| ③ ㉠, ㉢, ㉣ | ④ ㉠, ㉢, ㉣, ㉤ |

문 5.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인력자원에 해당하는 사람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중점관리대상업체로 지정된 동물사료의 생산·수출입·판매업체에 종사하며 미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70세인 국민
- 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하고 한국에 체류하는 일본 국적의 60세인 외국인
- ㄷ. 독일의 법령에 따른 기술면허를 취득하고 서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45세의 국민으로서 중점관리대상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전력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에 종사하는 자
- ㄹ. 영국 소재 대학에서 생물학을 전공한 학사학위소지자로서 기업체의 연구기관에 종사하며 부산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20세인 국민

- ① ㄱ, ㄷ
- ② ㄴ, ㄹ
- ③ ㄱ, ㄴ, ㄷ
- ④ ㄴ, ㄷ, ㄹ

문 6.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비상대비업무담당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시·군·구 및 소속 행정기관에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 ②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대상 업체가 도산으로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이 해제된 경우 국무총리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대상 업체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대상 업체에 두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임명하고, 그 업무 수행을 지도한다.
- ④ 국회사무총장은 국무총리에게 소속 비상대비업무담당자가 그 임무에 적합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문 7.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비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업체가 비축한 물자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가 선포된 경우에 사용하려면 미리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한다.
- ② 정부가 비축한 물자가 성능이 더욱 우수한 대체품의 개발 또는 기술개발 등의 사유로 비축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주무부장관은 미리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그 비축을 해제할 수 있다.
- ③ 주무부장관은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에 대하여 자체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6개월분의 물자를 비축하게 할 수 있다.
- ④ 주무부장관은 정부 비축물자의 관리상황과 그 밖의 비축에 관한 사항을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매년 1월 31일까지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문 8.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인력의 참여 협력 요청은 「통합방위법」에 따른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로부터의 보호에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다.
- ②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 협력 요청은 중점관리대상자원으로 지정할 당시에 미리 그 참여 및 사용 협력에 동의를 받은 인력·물자를 대상으로 한다.
- ③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 협력 요청은 문서로 하여야 하나, 긴급한 경우 구두로 할 수 있다.
- ④ 주무부장관은 「통합방위법」에 따라 통합방위사태가 해제되더라도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주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을 연장할 수 있다.

문 9.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비상대비 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5년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기간마다 비상대비교육의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비상대비교육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무부장관, 시·도지사 및 교육감과 협조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 지방행정기관, 시·도 및 시·도 교육청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비상대비교육을 할 수 있다.
- ③ 국회·법원·헌법재판소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교육 참여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비상대비교육의 대상자가 되지 않는다.
- ④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업체의 장이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비상대비교육에 대한 위탁교육을 요청하는 경우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문 10.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2개 부처의 부문에 관련되는 지역별 훈련을 실시하려는 경우 실시명령은 국무총리가 그 훈련의 방법·기간 등에 대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발령한다.
- ㄴ. 비상대비업무와 관련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은 훈련이 면제된다.
- ㄷ. 1개 부처의 부문에 관련되는 전국 훈련은 그 훈련을 필요로 하는 각급 행정기관의 장이 인력훈련 부문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 ㄹ. 1개 부처의 부문에만 관련되는 지역별 훈련의 경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대비훈련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없다.

- ① ㄱ, ㄷ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ㄴ, ㄹ

문 11.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훈련의 통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훈련실시명령의 발령에 따른 인력훈련통지서의 교부는 훈련실시명령의 발령일부터 7일 이내에 훈련대상자 본인에게 하여야 한다.
- ② 국무총리가 인력훈련실시명령을 발령한 경우 그 훈련통지서의 발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하여야 한다.
- ③ 훈련을 갑자기 실시하는 경우에 인력훈련통지서의 교부기간은 줄일 수 있지만, 물적자원훈련통지서의 교부기간은 줄일 수 없다.
- ④ 인력훈련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장은 인력훈련대상자 본인이 없을 때에는 동일 세대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에게 인력훈련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문 12.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동시관리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정부는 비상대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방송 및 인쇄에 관한 시설과 그 시설에 종사하는 인력자원에 대하여 동시에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ㄴ. 훈련실시명령은 물적자원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주무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국무총리가 발령한다.
- ㄷ. 물적자원훈련통지서를 받은 선박의 소유자가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아 그 선박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훈련통지서 교부권자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 ㄹ. 훈련실시명령이 있는 경우 인력훈련통지서는 주무부 장관이 발급하여 훈련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장에게 교부하게 하여야 한다.

- ① ㄱ, ㄷ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ㄴ, ㄹ

문 13.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비축물자의 소유자가 그 물자의 관리상황과 그 밖의 비축에 관한 사항을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ㄴ. 훈련에 참가한 사람의 인도.인수를 위한 인도.인수사무소는 시.도지사 설치하여야 하고, 인도.인수 장소가 사용기관의 시설구역 안인 경우에도 사용기관에서 인도.인수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다.
- ㄷ. 행정안전부장관은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언제든지 비상대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ㄹ. 시.도지사가 시장등과 훈련대상자를 사용할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소속 직원을 인도.인수 장소에 출석시켜 훈련에 참가한 사람을 인도.인수하게 하는 경우, 인도.인수관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녀야 한다.

- ① ㄱ, ㄹ
- ② ㄴ, ㄷ
- ③ ㄱ, ㄴ, ㄷ
- ④ ㄱ, ㄷ, ㄹ

민방위기본법(시행령 포함)

문 14.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대 편성 절차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직장 민방위대 조직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발생한 자는 그 사실을 직장 민방위 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직장 민방위 대장은 소속 민방위 대원 중 퇴직한 자가 있으면 읍.면.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읍.면.동장이나 직장 민방위 대장은 2년마다 민방위대를 편성한 후 소속 민방위 대원에게 민방위대 편성 사실과 소속 및 임무 등을 알려야 한다.
- ④ 민방위대의 조직에서 제외되는 자가 속한 직장의 장은 그 소속원이 신분을 취득하거나 상실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원의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문 15.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 준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법원행정처장에게는 민방위 계획에 따라 대피호의 설치 등 민방위 준비를 해야 할 의무가 부과되어 있지 않다.
- ② 시·도지사가 비축하거나 설치·정비하여야 하는 물자·시설 및 장비에는 지하 양수시설이 포함되지 않는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민방위 준비에 따른 시설·장비 또는 물자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직접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준비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문 16.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 편성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민방위사태 발생 시 통·리 민방위대의 대장이 65세 이상의 고령, 심신 허약 등의 사유로 현장 지휘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읍·면·동장이 지정하는 자를 통·리 민방위대의 대장으로 할 수 있다.
- ② 통·리 민방위 대원과 민방위기술폰성 대원 및 직장 민방위 대원은 중복하여 편성하지 않는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공조합의 직장 민방위대가 운영실적이 부실하거나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편이나 해체를 명할 수 있다.
- ④ 민방위 대원이 20명 미만인 직장 민방위대를 통합편성할 직장 민방위대가 없는 경우에는 그 직장 소재지의 통·리 민방위대와 통합하여 편성한다.

문 20. 「통합방위법」에 따른 통합방위사태가 발생하자 강원도 A군 군수 甲은 민방위를 위하여 민방위대의 동원을 명하였다. 민방위기본법령상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甲은 동원 명령을 한 사실을 지체 없이 강원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甲은 동원의 시기.지역.대상.사유 및 동원 중의 행동 요령 등을 분명하게 밝혀 민방위 대원을 상대로 직접 동원 명령을 내려야 한다.
- ③ 동원 명령을 받은 사람이 동원 기간 중 결혼식이 있으면 민방위 대장은 직권으로 동원을 미룰 수 있다.
- ④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어 임무 수행 중 부상을 입은 자가 치료를 받으려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신청서를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甲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문 21.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1. 12. 15. 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을 실시하고자 한다. 충청북도 A군 B읍에 주소를 둔 甲은 통.리를 단위로 하는 지역 민방위 대원이다. 민방위기본법령상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甲에 대한 교육훈련 통지서는 B읍의 읍장이 2021. 12. 10.까지 교부 또는 송달하여야 한다.
- ② B읍의 읍장이 甲에게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교육훈련 통지서를 송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속 민방위 대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③ 甲이 교육훈련 통지를 받고도 교육훈련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충교육훈련을 받아야 하고, 이 경우 보충교육훈련 통지서는 훈련 시작 24시간 전까지 교부 또는 송달할 수 있다.
- ④ 甲이 직계존속의 장례로 인해 교육훈련을 유예받으려면 교육훈련이 시작되기 1시간 전까지 그 사유를 B읍의 읍장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문 22. 다음 사례에서 민방위기본법령상 甲이 받을 수 있는 재해 보상금 및 휴업 보상금의 총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甲은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어 임무를 수행하던 중 큰 부상을 입어 치료로 인해 90일간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였고, 이 사고로 인해 장애등급 제4급의 장애판정을 받았다. 고용노동부에서 조사·공표하는 전체 산업체 월평균임금총액은 300만 원이고, 통계청이 매년 조사·공표하는 도시가계비와 농가가계비를 평균한 금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단위로 계산한 금액은 10만 원으로, 양자 모두 최근 3년간 변화가 없다.

- ① 8,100만 원
- ② 9,000만 원
- ③ 1억 800만 원
- ④ 1억 1,700만 원

문 23. 민방위기본법령상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A도 B시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가 선포될 것이 확실하여 민방위를 위해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발생하였다. 이 지역 C동의 동장 甲은 민방위대의 동원이 필요하여 동원을 명하였고, C동에 주소를 둔 乙은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어 임무를 수행하던 중 부상을 입어 장애등급 제3급의 장애판정을 받았다.

— <보 기> —

- ㄱ. 甲은 C동에서 민방위상 지장이 있는 영업 또는 그 밖의 업무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 ㄴ. 乙이 부상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보상 대상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 민방위 대장은 그 사실을 甲과 B시의 시장 및 A도의 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ㄷ. 乙의 재해 보상금은 A도가 부담한다.
- ㄹ. 乙이 재해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B시의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①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문 24. 기록적인 집중호우에 의해 A도에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가 선포되는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였다. 민방위 기본법령상 이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접경지역의 읍·면·동장은 민방위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 ② 홍수예보 및 경보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수계에서의 홍수에 따른 재난 경보는 홍수통제소장이 발령할 수 있고, 이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A도의 도지사는 민방위를 위하여 응급조치를 취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주민의 피난을 명령할 수 있고, 이로 인해 피난명령을 받은 자는 A도의 도지사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A도의 도지사가 민방위를 위하여 건물의 일시 사용 조치를 함으로써 이로 인해 손실을 입은 甲에 대한 손실보상을 할 경우 건물 소재지 관할 시장은 甲과 협의하여야 한다.

문 25.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 경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행정안전부장관뿐만 아니라 시·도지사는 민방위 경보 통제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모든 영화상영관 건물의 관리주체는 민방위 경보단말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ㄷ. 행정안전부장관은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표준 및 기술기준을 제정·고시하여 적용하고 인증을 하여야 한다.
- ㄹ.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민방위 경보단말장비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 ① ㄱ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ㄴ, ㄷ, ㄹ

예비군법(시행령 포함)

문 26. 예비군법령상 예비군의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사변 상황에서 국방부장관이 거주지 단위의 지역방위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021. 12. 11. 예비군을 조직하려는 경우, 2012. 4. 26. 공중방역수의사의 복무를 마친 보충역의 병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 ㄴ. 지원하여 직장예비군에 편입된 사람이 다른 직장으로 전출된 경우, 그 복무기간은 종료된다.
- ㄷ. 예비군대원으로 지원하려는 사람은 최종 선발예정일이 속한 다음 해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 ㄹ. 지원하여 지역예비군에 편입된 사람의 복무기간은 2년이나, 국방부장관은 직권으로 복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ㄷ, ㄹ

문 27. 예비군법령상 소집통지서의 전달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수임군부대의 장은 소집통지서를 전자문서로 전달하려면 미리 예비군대원에게 전자우편주소와 수신 동의를 받아야 하며, 훈련소집일 3일 전에 인터넷을 이용하여 훈련 일정을 공시하여야 한다.
- ㄴ. 예비군대원 본인이 없을 때에는 같은 세대 내의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있고, 그 자녀에게 전달된 때에 예비군대원 본인에게 소집통지서가 전달된 것으로 본다.
- ㄷ. 수임군부대의 장이 동원에 대비한 불시(不時) 훈련을 하려는 경우 예비군대원에 대한 소집통지는 방문 통보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ㄹ. 예비군대원을 훈련할 때 수임군부대의 장이 본인에게 소집통지서를 전달해야 하는 기한은 훈련소집일 7일 전까지이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ㄷ, ㄹ

문 28. 예비군법령상 예비군의 복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예비군복은 예비군대원이 동원되었거나 교육훈련을 위하여 소집되었을 때에만 착용한다.
- ② 예비군표지장 중 견장은 지휘관만 착용한다.
- ③ 국방부장관은 전시에 지역방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비군특수복의 착용방법에 관하여 「예비군법 시행령」의 규정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④ 여성 예비군대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군모가 아닌 모자를 착용할 수 있다.

문 29. 예비군법령상 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결혼 일자를 정한 후 훈련명령을 받은 甲이 훈련일과 자신의 결혼 일자가 겹쳐 훈련명령에 응할 수 없을 때 본인이 원할 경우 훈련을 연기할 수 있다.
- ㄴ. 등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乙에 대하여는 훈련을 보류할 수 없다.
- ㄷ. 훈련명령을 받은 후 「형사소송법」에 의해 구속된 丙은 훈련명령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훈련 연기원서를 丙의 고용주로 하여금 소속 예비군중대장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ㄹ. 지방의회의원인 丁은 훈련일이 법률에 따라 국민이 직접 선거하는 공직 선거기간 중이 아닌 때에는 예비군 훈련을 받아야 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ㄷ, ㄹ

문 30. 예비군법령상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장공비가 2021. 11. 1. 경기도 A 지역에 침투하였다가 발각되어 도주하였다. 그 무장공비의 도주로로 예상되는 경기도 B 지역에서 무장공비를 고립시키기 위하여 전술상 다른 방법이 없다고 인정되어 수탁경찰서장 甲은 2021. 11. 3. B 지역 주민에 대한 피난 명령을 하였다. B 지역 주민 乙은 피난 명령으로 인해 농작물을 제때 수확하지 못하여 손실을 입었다. 甲은 2021. 11. 7. 乙에게 해당 농작물의 시가를 100만 원으로 적은 손실증명서를 발급하였다.

- ① 甲은 피난 명령을 하려면 피난 명령의 내용·기간·구역 등을 주민에게 통지하거나 게시하여야 한다.
- ② 甲은 피난 명령 내용을 수임군부대장에게 보고하거나, 경기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乙이 손실보상을 받으려면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乙이 손실보상금액에 관하여 이의가 있다면 보상금 지급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문 31. 예비군법령상 재해 등에 대한 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어 훈련 중에 부상을 입고 장애보상금을 받았다가 그 상이(傷痍)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사망보상금을 지급하되, 이미 지급받은 장애보상금은 공제하지 않는다.
- ② 육군참모총장이 휴업 보상금의 지급액을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 수임군부대의 장으로부터 휴업 보상금의 지급 요청을 받은 관할 군사령관은 육군참모총장에게 휴업 보상금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휴업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예비군대원은 본인이 소속된 군부대의 장, 훈련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에게 치료로 인하여 휴업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휴업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 ④ 예비군대원으로 훈련소집에 응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 중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보상금의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

문 32. 예비군법령상 甲 ~ 丁에게 해당하는 법정형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예비군부대의 지휘관 甲이 소속 예비군대원을 상대로 그 지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전시.사변이 아닌 상황에서 동원된 예비군이 작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작전지역에 출입하는 乙을 검문하자 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경우
- 훈련을 위하여 소집된 예비군대원 丙이 훈련을 담당하는 교관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않고 반항한 경우
- 전시.사변 상황에서 예비군 동원명령을 받은 예비군대원 丁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원에 응하지 않은 경우
- 예비군의 무기.탄약.장비를 보관할 책임이 있는 戊가 과실로 이를 분실한 경우

————— <보 기> —————

- ㄱ. 甲은 벌금형에 처할 수 있지만, 乙은 벌금형에 처할 수 없다.
- ㄴ. 甲에 대한 법정형보다 戊에 대한 법정형이 더 경하다.
- ㄷ. 乙의 행위가 무장공비와 교전 중인 상황에서 발생한 경우, 乙과 丁에 대한 법정형은 같다.
- ㄹ. 丙과 달리 戊는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ㄷ, ㄹ

문 35. 예비군법령상 예비군의 편성 및 해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직장예비군은 직장을 단위로 그 소속 예비군자원이 81명 이상 400명 이하인 경우는 중대로 편성한다.
- ② 같은 구내(構內)의 예비군자원을 단일 직장예비군으로 통합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장예비군을 통합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③ 직장예비군을 편성한 직장의 장이 예비군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직장예비군을 편성기준에 맞는 부대로 조정할 것을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신청한 경우, 그 신청을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수임군부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해당 직장의 장에게 부대를 조정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 ④ 대대로 편성된 직장예비군 소속 예비군자원이 400명이 된 경우 직장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해당 직장예비군의 해체를 신청하여야 한다.

문 36. 예비군법령상 (가)와 (나)에 공통으로 들어갈 수 있는 답변으로 옳은 것은?

직장예비군으로 편성된 예비군대원이 예비군 동원과 관련하여 담당자에게 아래와 같이 문의하였으며, (가)와 (나)는 각 질의에 대한 담당자의 가능한 답변 내용 중 일부이다.

- 제가 예비군 동원을 보류 받고자 하는데 그 요건이나 이후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가)

- 제가 예비군 동원을 명령받은 상태에서 연기하고자 하는데 그 요건이나 이후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나)

- ① 직업이 항공기정비사라면 그 요건에 해당합니다.
- ② 본인이 해당 원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고용주로 하여금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③ 해당 원서를 제출한 뒤 그 사유가 없어지면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 예비군중대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④ 해당 원서는 소속 예비군중대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 37. 수임군부대의 장이 예비군을 동원하고자 한다. 예비군법령상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동원명령을 받은 예비군대원이 동원을 연기할 때에 그 사유를 고의로 발생하게 하거나 거짓된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를 처벌하는 법정형에 구류가 포함된다.
- ㄴ. 동원명령 발령 당시 섬 지역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동원명령 발령 후 24시간 이내에 응소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 ㄷ. 무장소요가 있는 지역에서 경찰력만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경우에도 신속한 진압을 위해 예비군을 동원할 수 있다.
- ㄹ. 예비군을 동원할 때에는 예비군부대의 지휘 계통에 따라 동원을 명하거나 수탁경찰서장에게 동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포함)

문 3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안전정책조정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안전기준관리 및 재난사태의 선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사전 조정은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사무이다.
- ②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차관이 되고,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은 위원이 되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관장하는 차관으로 한다.
- ③ 회의는 위원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는 위원 5명 이상이 필요하다.
- ④ 위원장은 안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된 사항 중 국가핵심기반의 지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에 대해서는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문 3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중앙재난방송협의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중앙재난방송협의회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장 1명과 위원 중 호선하는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방송 관련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과 협의하여 위촉하는 사람은 중앙재난방송협의회 위원이 된다.
- ③ 중앙재난방송협의회 회의에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수당과 여비,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④ 중앙재난방송협의회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문 4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ㄱ. 국무총리는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지침을 5년마다 작성해야 하며, 이 경우 관계 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확정된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중 그 소관 사항을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지방자치단체 포함)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ㄷ.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확정된 집행계획에 변경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변경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ㄹ.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무총리로부터 통보받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그 소관 업무에 관한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 ㅁ. 시·도지사는 10월 31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은 12월 31일까지 소관 안전관리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ㄱ	ㄴ	ㄷ	ㄹ	ㅁ
①	O	O	X	O	O
②	X	X	X	X	X
③	O	X	O	O	O
④	X	X	O	X	X

문 4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의 예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소속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징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한 경우 수립 후 1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을 발생시킬 위험요인의 제거 명령을 받은 시설의 소유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하면 그 시설의 사용을 금지시킬 수 있다.
- ④ 정부합동 안전 점검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점검 대상 시설 등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관계인에게 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문 4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가) ~ (라)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매년 (가) 까지 다음 해의 재난관리자원에 대한 비축·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작성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은 (나) 의 승인을 받아 이를 확정하고,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과 연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 (다) 은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의 표준화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위기관리 매뉴얼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이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라)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u>(가)</u>	<u>(나)</u>	<u>(다)</u>	<u>(라)</u>
①	10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2 0 0
명				
②	5월 31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50명
③	5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2 0 0

명

④ 10월 31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행정안전부장관

1 0 0

명

문 43. 다음 사례에서 ㉠ ~ ㉣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에 위반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국가핵심기반으로 지정된 ○○산업시설은 X시 Y동에 소재하고 있다. Y동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산업시설이 마비되자, X시의 시장 甲은 질서의 유지를 위해 Y동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급수 수단의 확보에 종사하고 있는 乙에게 Y동에서의 대피를 명하였다. ㉡ 甲은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붕괴 사고로 인한 재난예방을 위하여 특별히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Y동을 특정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하였다. 한편, Y동이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안전등급의 평가기준 중 D등급에서 C등급으로 조정되자, ㉢ 甲은 Y동의 명칭 및 위치, 관계인의 인적사항, C등급의 평가 사유를 X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였다. 이후 ㉣ 甲은 Y동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을 분기별로 1회 실시하였다.

① ㉠, ㉢

② ㉠, ㉣

③ ㉡, ㉢

④ ㉢, ㉣

문 4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사태의 선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재난사태의 선포를 건의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 ②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피명령을 할 수 있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여행 등 이동금지 명령을 할 수 있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없어 선포된 재난 사태를 해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문 4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의 대응조치로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시·도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이 재난발생에 따른 응급조치로서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방역을 실시하였다.
- ㄴ. 시장·군수·구청장이 재난에 대한 경보를 발령하기 위해 필요하여 전기통신시설의 소유자에 대해 전기통신시설의 우선 사용을 요청하였다.
- ㄷ. 재난이 발생하여 중앙대책본부장이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민방위대를 동원하였다.
- ㄹ. 시·도지사가 긴급구조활동을 하기 위하여 헬기의 운항이 필요하게 되어 헬기운항통제기관에 통보하고 헬기를 운항하였다.
- ㅁ.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이 긴급구조활동을 하면서 해당 지역 안에 있는 사람에게 미리 대피장소를 지정하여 대피를 명하였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ㅁ
- ④ ㄷ, ㄹ, ㅁ

문 4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위기경보의 발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에서 자연재난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관심단계의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 ② 산림청장은 산불로 인한 사회재난의 징후를 식별한 경우 심각단계의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 ③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위기경보를 발령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행정

안전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이 심각단계의 위기경보를 발령하려면 재난상황이 긴급하여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문 4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정 및 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소방본부장이 위험구역을 설정하고 위험구역에서 퇴거조치를 함에 따라 손실을 입은 자는 국가에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ㄴ. A도에 발생한 자연재난으로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재난인 경우,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기준은 A도의 조례로 정한다.
 ㄷ. B군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국가의 시설과 관계되는 재난에 대하여 응급조치를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에 따라 B군의 군수로부터 응급조치 종사명령을 받은 자가 응급조치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은 국가가 부담한다.
 ㄹ. C군의 군수가 응급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응원을 D군의 관할 구역에 있는 E군부대의 장에게 요청한 경우, 응원을 받은 C군의 군수가 그 응원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ㄷ, ㄹ

문 48. A군에서 발생한 환경오염사고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A군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으로는 재난의 수습이 곤란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자, 중앙대책본부장의 건의를 받아 대통령이 A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A군의 군수는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피해상황을 신속하게 조사한 후 지체 없이 자체복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A군에 대하여 「재해구호법」에 따른 의연금품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A군은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원인제공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에게 A군이 피해주민의 지원을 위해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 ④ A군의 군수는 A군의 피해상황을 종합하는 재난복구계획이 수립·시행되기 전에는 재난관리기금·재해구호기금 및 의연금을 집행할 수 없다.

문 4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안전문화 진흥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정한 안전관리현장의 제정·고시
- ㄴ. 국민이 안전문화를 실천하고 체험할 수 있는 안전체험시설의 설치·운영
- ㄷ. 안전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 ㄹ. 지역별 안전수준과 안전의식을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안전지수의 개발 및 공표
- ㅁ. 지역사회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안전사업지구의 지정 및 지원

- ① ㄱ, ㄷ
- ② ㄷ, ㄹ
- ③ ㄱ, ㄷ, ㅁ
- ④ ㄴ, ㄹ, ㅁ

문 5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의 관리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게 한 재난에 대하여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을 편성하여 재난원인조사를 한 경우, 재난원인조사단은 재난원인조사 결과를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국무총리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③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하여 수집한 재난피해자등의 정보를 관리하는 전

기통신사업자가 재난 대응 이외의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한 경우, 위반 행위자 외에 그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동일하게 처벌된다.

- ④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사회재난에 관하여 재난수습 완료 후 수습상황 등을 기록한 재난백서를 작성한 경우 그 재난백서를 신속히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보고하여야 한다.